한 '경선 룰' 갈등… 朴-李 충돌하나

경선 시기 '9월안'-'7월안' 놓고 티격태격

경준위 시한 18일로 연장… 합의 불투명

한나라당이 '경선 룰'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가 1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경선준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18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며 '경선 룰' 갈등을 미봉하고 시간을 벌었지만, 양대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여전히 '일전불사'를 다짐하며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원희룡 의원이 "양대 주자 중심의 경선 룰 논의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경준위 논의 불참 선언과 함께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거듭 내비쳐 본선은 고사하고 예선을 치르기도 전에 당이 '적전분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최고위원들이 '7월-20만명', '9월-23만명'의 경준위 복수 중재안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파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양상을 재연, 당 전체가 경선룰 대립이란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양대주자는 언뜻 보면 당헌.당규에 따른 현행 방식(6월-4만명)을 고수하고 있는 듯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박 전 대표는 9월안, 이 전 시장은 7월안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구태 정당으로 돌아가려는 조짐이 있다. 구태 정당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후보들의 유불리에 따른다면 그건 공당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당인 것"이라고 경선 룰 논의양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애초 경선 룰 논의가 '9월-20만명' 단일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가 이 전 시장측의 항의로 복수안이 나오게 됐다는 의구심의 우회적 표현이란 분석이다.

이 전 시장은 경준위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박 전 대표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언급을 삼갔으나 측근 의원들은 "터무니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준위 대리인으로 활동한 박형준 의원은 "박 전 대표측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다. 7월-20만명안은 우리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이견절충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박 전 대표측이 시기와 관련해 겉으론 6월을 주장하면서도 속으로 9월을 고집하며 경선연기를 주장하는 데 이는 당내 갈등만 더 깊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월안 수용 가능', '9월안 절대 불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손 전 지사를 비롯한 나머지 주자들은 "당이 박-이 두 주자 중심으로만 돌아간다. 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경선 룰을 논의한다면 경선 참여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선주자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최고지도부는 경계령을 발동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준위 중재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일갈했고, 김형오 원내대표는 "주자들이 국민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홍업 출마에 천정배 "…"

"올 대선 경제·평화·남북관계가 쟁점될 것"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민생정치준비모임을 이끌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12일 "김홍업씨의 무안·신안 보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생정치모임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합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앞으로 논의가 정리되면 입장을 표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또 향후 대선 이슈와 관련, "향후 대선에서 경제와 함께 평화와 남북관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생정치준비모임 토론회에서 최재천 의원은 "'호남+α=대선 승리'라는 기존의 정치공학적 선거전략은 호남 주민의 능동적 선택을 가로막고 '영구적 영남후보론'의 기반이어서 단호히 거부한다"며 "민생정치준비모임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합리적 진보를 표방, 교육·직장·주거문제 등에 집중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호남민들은 열린우리당을 희망있는 정당으로 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민주당도 미래 한국민주주의의 담당자로 보지 않고 있다"며 "지역과 소통하는 합리적 리더십을 구축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호남민들의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정치, 합리적 진보 등으로는 동력을 갖기 힘들다"며 "외교와 통일 정책을 개발하고 리더십 있는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민생정치모임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상갑 변호사는 "그동안 대선을 보면 지역연합적 지형이 약화하는 반면 정책적 지형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민생정치모임은 개혁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유망한 대선 예비주자들을 끌어들이거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원내외 개혁적 인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과 결합, 현실적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2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생정치준비모임 토론회에 참석한 천정배(오른쪽에서 세번째), 김태홍(오른쪽에서 네번째), 최재천(오른쪽에서 두번째) 의원 등이 토론회 직전 동료 의원과 함께 박수를 치며 토론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명박 출판기념회 YS, 축사 않기로

"이명박 측면지원" 여론에 취소

김영삼 전 대통령이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자서전 '온몸으로 부딪쳐라'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당내 대선 예비후보인 이 전 시장에 대한 측면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측 김기수 비서실장은 12일 "내일 출판기념회에는 참석하지만 축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축사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그 중 한 사람으로서 축사를 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축사까지 결정하며 사실상 지지의사를 표명했던 김 전 대통령이 갑작스레 결정을 번복한 것은 결국 이 전 시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이 출판기념회 행사를 앞두고 캠프내 한 중진 의원의 주선으로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를 직접 만나 부산 지역을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YS가 몹시 언짢아 했다는 후문이다. 이 전 시장 캠프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행사참석을 요청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7 국민승리위원회 이사철 공보위원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를 지낸 김유찬씨의 위증교사 및 살해협박 주장에 대한 검증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찬 주장 증거 없다"

한나라 경준위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위원장 김수한)는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를 지낸 김유찬 씨의 '위증교사' 및 '살해협박' 등 주장과 관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경준위 이사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위원회 산하 검증위가 내린 최종결론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검증위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진술이 모순되는 등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대부분 주장이 법적 하자가 없는 사항이고 (이 전 시장의) 도덕성을 문제삼을 내용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증교사와 관련해선 "(당사자로 지목된) 이 전 시장의 비서관 이광철씨가 미국으로 이민 가 소재가 불명이기 때문에, 김씨의 주장만으로 위증교사를 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면서 "김씨 자신도 (당시) 자신의 진술번복으로 이 전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일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일자 등 신빙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보였으며,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었다"면서 "권영옥, 주종탁 씨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은 '구체적 위증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혀 위증교사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참여정부 하산은 없다"

취임사서 "임기말 해이 경계·도덕성 지켜야"

"참여정부에 하산(下山)은 없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 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도전적 마무리'를 취임 일성으로 던지며 비서실 다잡기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임기 후반, 하산 아닌 정상 향한 마지막 코스'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읽어내려가며 거듭 직원들에게 새로운 각오로 분발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해 5월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10개월 만에 복귀한 문 실장은 "밖에서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열정과 충정으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해 주셨다"고 격려한 뒤 세 가지를 특별히 당부했다.

그는 먼저 "참여정부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분명히 갖자"면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하루도 헛되이 보내거나 만만하게 지나가는 허술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말년의 해이를 각별히 경계하자"며 도덕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자고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의 1년에 대해 "5년 임기의 1년은 조용히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무리의 기간으로만 삼기엔 너무도 길고 소중한 시간"이라며 "많은 일들이 남아 있고, 미처 못한 과제도 있고, 성과를 더 내야 하는 과제들도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